

야 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내일 본회의 표결

가결시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야 "159명 희생 책임 정부에 있어" 여 "이재명 방탄용...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이날 본회의의 시작 전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민주당 김승원, 박주민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이 했던 헌법적, 준법률적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며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걸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은 국회 제

일 역할이고, 이 문제엔 어떤 타협도 없던 입장으로 당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이 장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지난 2015년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회), 2020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2회) 등이 있었으나 가결 사례는 없었다.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법상 탄핵 소추위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위원장이 나서게 돼 탄핵 소추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결 시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기존 가결 사례 중에서도 실제 인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당 의원 모두에게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입전문회사들이 불법이나 탈세가 있을 경우 회사 면허를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운송회사가 지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도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주와 차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운송사가 일정 금액 아래로는 차주에게 덤핑을 못하게 하고, 화주가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주에게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제를 적용토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3 회동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3+3 협의체 회동... "여가부 폐지 더 속의"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6일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둘러싼 이견만 재확인했다.

여야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3+3 협의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국가

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입장차를 나타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조직법 관련해 두 개 부처에 대해서는 합의

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속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운법 대상만 먼저 하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등에 대해서는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속의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승남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6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



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 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은 2010년 7.4조원에서 2020년 34.6조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동용,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법안 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사진)은 6일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 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



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등 4개 안 압축 복수안 성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날부터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가졌다.

남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선거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워크숍에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